

(통권 21-4호)

예산·재정정책 정보

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,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Tel : 635-5205)

2021. 4. 9.



충청남도의회사무처
(예산정책담당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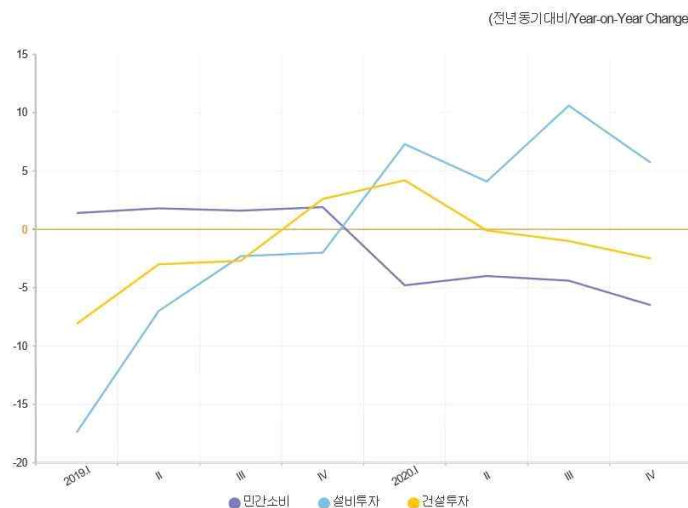
분 야 별 목 차		
분 야	제 목	페이지
I. 경제	1. KDI 경제동향 (2021. 4)	1
II. 재정	2. 2020 지역발전지수 3. 외국인 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현황과 과제	2 4
III. 정책	4.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5.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6.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7.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분석	6 7 9 11
IV. 법률 제·개정	8.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- 머금은 담배 가격조정 (백종헌 의원 등 10인)	12

1. KDI 경제동향 (2021. 4)

-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경제심리도 개선되면서 경기부진 완화
- 2월 전산업생산은 조업일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관련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소폭의 증가 기록
 -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상승
 - 3월 수출도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개선 흐름이 지속
 - 서비스업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, 2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진이 일부 완화
-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
- 다만, 3월에도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해외에서도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,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

출처 : KDI (경제동향, 2021. 4), 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민간소비 및 고정투자(2010년 불변가격)
Growth Rate of Private Consumption and Fixed Investment(at 2010 Constant Prices)



2. 2020 지역발전지수

- 시·군의 상대적 현황진단, 지역발전정책 목표설정, 정책 모니터링과 성과측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발전지수 분석, 특별지수로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 개발

- 2020년 지역발전지수(RDI)를 활용하여 시·군 발전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여건 종합분석, 특정영역별로도 지역여건 비교·분석
 - 삶터(생활서비스 지수), 일터(지역경제력 지수), 쉼터(삶의 여유 공간 지수), 공동체의 터(주민활력 지수) 등의 영역지수들로 구성된 RDI를 바탕으로 159개 시·군의 발전정도 파악
 -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지역은 경기도 시·군이 가장 많이 포함
 -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지역은 주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중심
 - 삶의 여유공간 지수의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강원, 충북, 경북 등 산간지역과 동해안, 서남해안 등 다도해지역 중심
 - 주민활력지수 상위권지역은 수도권남부와 충청권북부, 부산, 대구 등 대도시 인접지역

-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동안 RDI 비교 분석
 - 지역발전지수를 종합한 결과, 2010년에 주로 수도권과 남동권, 일부 강원권에 분포하던 상위권그룹이 전남지역 일부로 확대
 - ‘생활서비스 지수’ 상위 50위권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시·군, 그리고 지방중심도시가 다수 차지, 최근 그 경향 더욱 강화됨.
 - 2010년대 초반까지 ‘지역경제력 지수’ 상위권 시·군은 수도권 및 충청권 그리고 동남권 산업지대에 주로 분포, 최근 전남북 및 경북 일대로 상위권 지역이 일부 확산

- ‘삶의 여유공간 지수’ 상위권 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, 경향지속
- ‘주민활력 지수’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속한 시·군, 지방거점도시, 충청권 일부 시·군 등이 주로 상위권

-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성장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지역재생잠재력지수 개발
 - 군 지역이 시 및 특·광역시보다 인구 재생력 측면에서 큰 역할
 - 특·광역시 경우 지수평균이 1이하로 미래인구 재생력측면에서 부정적, 지수값이 2이상 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19개 군
 -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낮게 분포
 - 경북·경남, 전남 군 지역에서 지수 값이 높은 특징

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(연구보고서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3.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현황과 과제

○ 국내 외국인 수와 부동산 거래 규모

- 국내 등록외국인은 2015년 약 114만명에서 2019년 약 127만명으로 11.3% 증가(교육, 이민, 영주 등 사유)
- 외국인 부동산거래는 2015년 1만9천건에서 2020년 2만6천건으로 1.3배, 건축물은 1만4천건에서 2만1천건(1.4배)

○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입법 동향

-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 방지,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, 상호주의 위배 문제로 폐기

○ 외국인 세대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로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취득세율 적용

- 2020년 8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% 또는 12%의 취득세율이 적용¹⁾
- 외국인 주택취득 시 1세대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(동거인 제외)으로 구성된 세대
- 따라서 등록외국인이 아닌 체류외국인이나 내국인인 친인척이 외국인을 대리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

○ 외국인 세대 보유주택에 대한 과세자료 한계

- 2018년부터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 가능

1) 내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(동거인 제외)을 기준으로 판단

- 취득자가 외국인인 경우 실무적으로 지방세표준시스템에서 등록 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지방세표준시스템상 외국인 세대의 보유주택 확인 한계

○ 외국인에 대한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

-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적용하도록 하지만,
-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여 외국인 세대에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는 것에 한계, 외국인 세대에 대한 과세 인프라의 대폭 강화 필요
- 관련 제도 한계 고려하여 외국인 세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 배우자나 혼인 중 자녀에 제한하도록 개정 검토

○ 외국인에 관한 취득세 정책방향

- 거주목적과 무관하게 순수 투자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혼재
- (2020년 8월 국세청) 외국인이 실거주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·보유하는 것을 투기성 수요로 의심하고,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의 형태로 통보 계획 밝힘
-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, 그 취득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에 영향, 부작용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선행
- 지역별, 건축물 용도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 제시
- 지역별 외국인 주민의 비중과 국적 분포, 지역별 외국인의 주택 보유 비중, 실거주 여부 또는 실거주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취득세 정책방안 고안

출처 : 한국지방세연구원(TAX ISSUE PAPER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4.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

- ‘보건의료 데이터’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·숫자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(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2조)
-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예산추이는 '19년 2,279억원에서 '20년 7,332억원, '21년 8,494억원으로 증가 추세
 - '21년 과기정통부 4,773억원, 보건복지부 1,981억원, 산업부 1,279억원, 질병관리청 256억원, 기타부처 166억원임
 - '21년 기준 수집·구축 4,624억원, 활용 3,588억원, 표준화·정보보호 282억원임
-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·구축, 정보보호
 - 바이오 데이터 통합수집·구축, 공공·민간 암 데이터 통합 수집·관리,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·구축, 의료기관 임상·진료 데이터 수집·공유,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표준화 등 필요
 - 안전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,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
-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
 - 빅데이터 플랫폼,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등에 대한 활용성은 다소 낮으므로 데이터 품질관리,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필요
 - 정밀의료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과 창출 위해 관련 정부 재정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 필요
 -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 급여 진입 관련 제도의 보완 검토 필요
 - 의료데이터분석 지능형 SW(닥터앤서) 관련 임상사례가 부족하거나 수익성이 저조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개발 필요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NABO브리핑, 2021.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5.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

- 사회기반시설은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도로와 철도 등을 의미하나 최근에는 생활편의를 위한 도서관, 유치원, 학교 등으로 확대
 -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경제성장 촉진 뿐만 아니라 투자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불로소득(개발이익) 발생
- 개발이익은 토지공개념, 사회국가 원리, 외부효과의 교정, 사용자부담 원칙 적용 등의 관점에서 환수 정당화 여지
 - (토지공개념) 토지는 다른 재산과 비교하여 공공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공급도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 이용이 매우 중요
- 부동산 보유-개발-처분 단계별 개발이익(불로소득) 환수
 - (보유단계) 과거 수익자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를 통해 일부 환수, 현재는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활용
 - (개발단계) 현재 개발부담금,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활용
 - (처분단계)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
-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이 개발이익 환수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간 세부담이 불형평한 양상 존재
 - 보유 및 개발 단계에서 개발이익 환수 필요하나, 제도의 미비, 낮은 부담률 등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
- 공시지가 산정시 일부 기반시설 인접성 반영 부족, 재산세 도시지역분 역할 약화, 양도소득세의 불합리한 운용방식에 따른 불

로소득 환수 저조, 공공투자 주변지역 개발이익 환수제도 미비

○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으로,

- 단기적으로 도시철도, 광역철도 등 그 주변지역 지가상승을 주도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영향은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반영되는 정도가 미흡하므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 지가변동을 좀 더 자세히 반영할 수 있도록 ‘개별토지특성’ 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등 공시지가 선정방식에 사회기반시설 영향을 반영하는 방안
-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중과 규정 신설 및 수익자부담금 재도입 검토 필요
 - 과거 도시계획세 도입의 취지를 살려 도로, 도시철도, 광역철도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특정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관련 구역을 지정하여 그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 검토 필요
 - 현재 최협의의 개발이익 환수수단이 전무한 실정으로 다수의 문헌에서 수익자부담금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
 - 수익자부담금은 공공투자의 효과가 그 주변지역의 토지에 지가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 지가상승분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

출처 : 한국지방세연구원(KILF REPORT, 2021. 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6.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

-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류 소비지출액이 높고, 고가인 쇠고기의 경우 저소득과 고소득과의 지출액 차이가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큼
-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소득 변화는 없지만 근로시간만 줄어든 경우 가정의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
 - 반면, 소득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 육류 소비는 오히려 감소
 - 근로시간이 감소한 집단의 회식빈도 및 직장 내 육류소비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
- 육류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제 검토 필요
- 첫째, 세대간 육류소비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육류생산에 있어 다양성 확보
 - 현재 마블링(marbling)과 삼겹살 중심의 획일적 육류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축산업의 환경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유기인증 축산물,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비중 확대 필요
- 둘째, 육류의 신선도와 소포장 수요 확대로 신선포장육의 육류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산 육류의 유통 차별화
 - 신선육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(JIT/On-Demand), 육류의 가공, 포장, 배송 일원화된 공급망(SCM) 구축 선행
- 셋째, 육류 등급제도의 개편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편익을 함께 고려하고, 소비자 중심의 시장 차별화를 강화하는 방향
 - 지금까지 육류 등급제도는 국내산 육류를 수입 육류로부터 차별

화시키는 데 기여

- 그러나 등급별 쇠고기 수요함수 분석결과, 1+등급이상의 한우고기는 호주산 쇠고기와 일정 수준 대체 관계가 있고,
- 2등급 이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와도 약한 대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, 육류 등급제에 기반한 한우고기시장 차별화 강화

○ 넷째, 국내산 육류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소비 저변확대 필요

- ‘안전하고 신선하다’와 같은 영향력 큰 이미지는 잘 관리 필요
- ‘아동과 여성에게 적합하다’와 같은 한우고기 이미지는 많은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도록 이미지 적합도 개선 노력 필요
- 이러한 이미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필요

○ 다섯째, 온라인 수요 증가에 따른 육류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

- 소비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의 저지방 부위는 포장 등 제조비용 부담으로 온라인 유통에도 어려움이 예상
- 국내산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입 돼지고기 육가공품과 차별화된 신선한 고품질 국내산 돼지고기 육가공품 개발이 필요
- 원료가격의 안정성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 공급체계 구축 필요

○ 마지막으로 주 52시간제 시행과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소비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육류 라벨링 표시 및 안전성 강화 필요

-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의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요리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

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(연구보고서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7.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분석

-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(함께누리)은 '13년 42억원, '20년 157억원으로 예산증가에도 지원예산의 50% 이상이 특정 사단법인 단체 집중, 지원체계의 불공정성, 비형평성, 비전문성 초래
 - 5년간('16-'20) 540억원 중 335억원(62%) 지정사업 형태 지원
- 문화예술 공공 재원의 분배를 담당하는 기관의 보편적인 역할은 공정성,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공공재원의 쓰임의 효과성 제고
- 장애인문화원사업 관련
 - 장애인문화원이 공모 없이 직접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예산 지원하여 불공정성이 초래 가능성, 효과성 저하 우려
 - 장애인문화원 역시 이런 보편적인 역할에 부합하는 공공 기관으로의 역할 정립 필요
 - 과도한 예산을 직접지정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불공정성 초래
 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의 주요 문화재단에서는 지정사업의 문제점과 공모사업의 장점을 인식하여 공모로 지원
- 문화예술 시설 건립, 예술인복지 정책 등에 장애인 영역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문체부 정책 전반에 장애인 문화예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
- 지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의 제도 도입
 -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,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, 공정성 담보를 위한 심의 설문조사 실시 등 보충적 제도 도입 필요

출처 : 한국문화관광연구원(연구보고서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8.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종헌의원 등 10인)

-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‘머금은 담배’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,
 - 실제로 ‘머금은 담배’는 유연담배에 비해 유해물질 함량이 현저히 적고 미국 FDA는 2019년 10월 ‘머금은 담배’에 대하여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.
- 그러나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‘머금은 담배’가 우리나라에서는 3~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‘머금은 담배’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소비자들의 ‘머금은 담배’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.
- 이에 ‘머금은 담배’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‘1그램당 364원’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‘머금은 담배’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‘20파우치’로 변경하고,
 -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‘1,007원’으로 변경 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

출처 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